

한눈에 보는
《일제침탈사 바로알기》



《일제침탈사 바로알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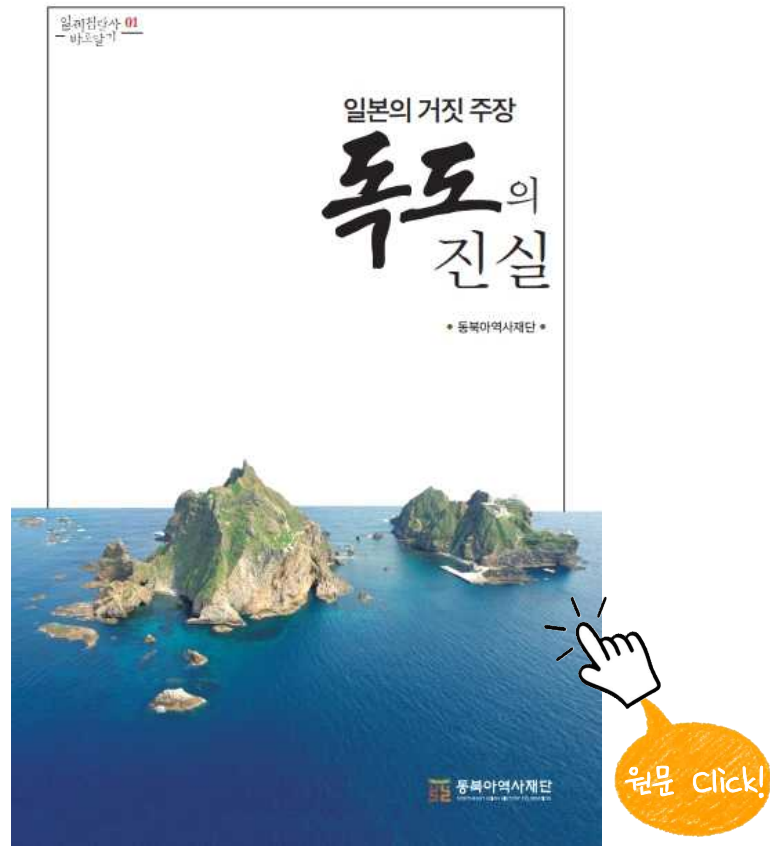
일반 독자와 학생들이 일제강점기의 역사와 식민지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획한 역사 교양서이다.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독도, 문화재 수탈, 언론·문화 통제 등 주요 주제를 권별로 깊이 있게 다루며, 일제 식민지배를 둘러싼 역사 왜곡과 오해를 바로잡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다.

또한 풍부한 사진과 사료, 지도, 도표 등을 수록하여 내용의 신뢰성과 이해도를 높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 인식 문제와 과거사 현안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검증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춘 《일제침탈사 바로알기》 시리즈는 일반 독자는 물론 학생과 교사, 한국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고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입문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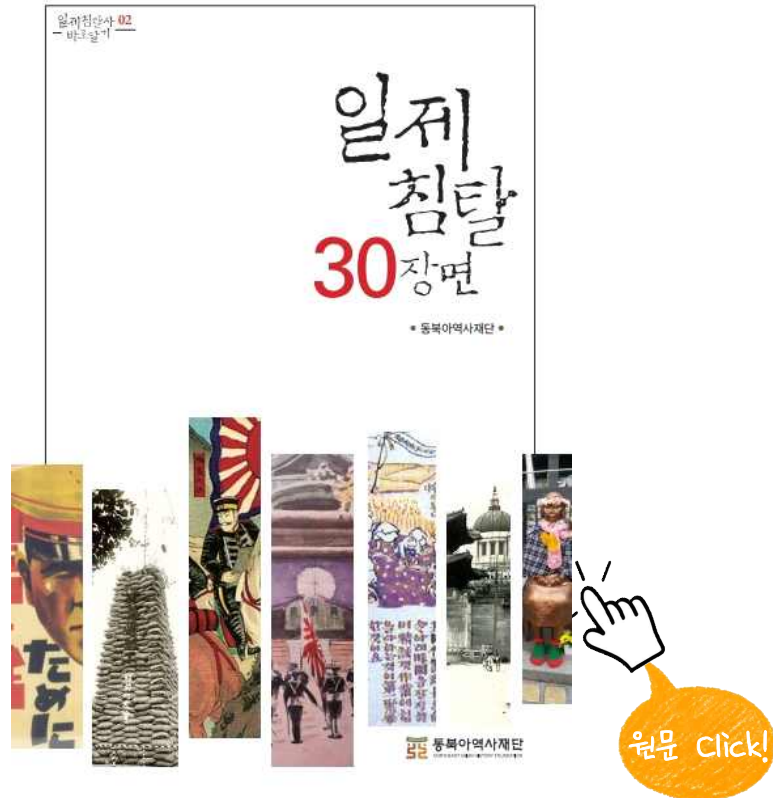
나아가 식민지배의 피해와 책임을 성찰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와 동아시아 평화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일본의 거짓 주장, 독도의 진실

동북아역사재단 편 | 30쪽 | 비매품 | 2019년 | ISBN 978-89-6187-48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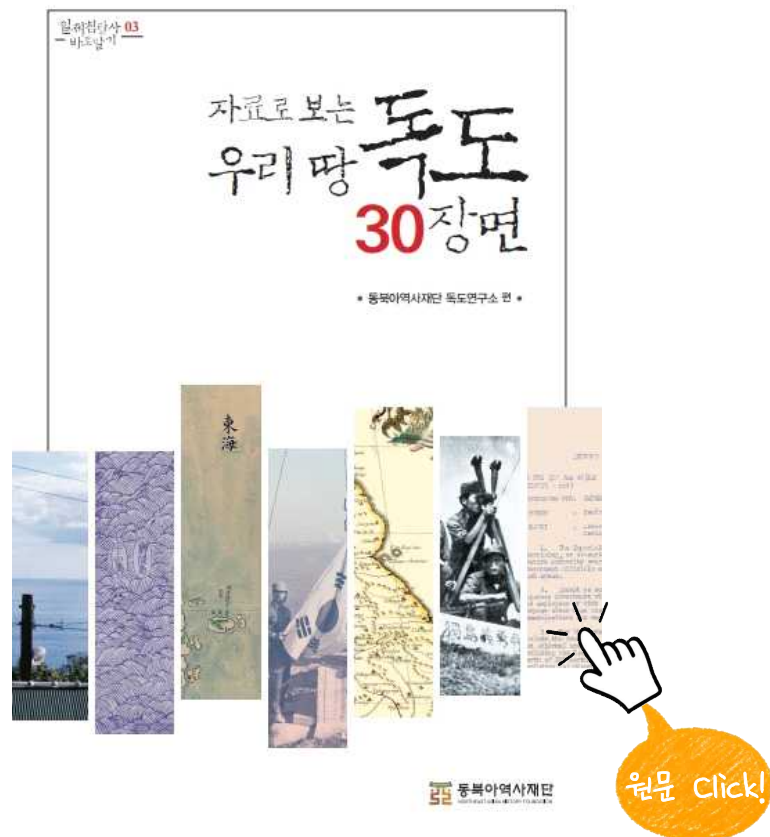
독도는 일본이 대한제국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탈당한 우리 영토다. 일본은 러일전쟁 중이던 1905년 독도를 자국 영토에 일방적으로 편입한 뒤, 오늘날까지 여러 자료를 내세우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일본의 주장을 10가지로 정리하고, 다양한 역사적 자료를 근거로 그 허구성을 밝힌다. 일본의 고문서와 고지도, 오늘날 독도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통해 독도를 둘러싼 역사적 진실을 살펴보고, 우리 땅 독도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일제침탈 30장면

동북아역사재단 편 | 132쪽 | 7,000원 | 2019년 | ISBN 978-89-6187-48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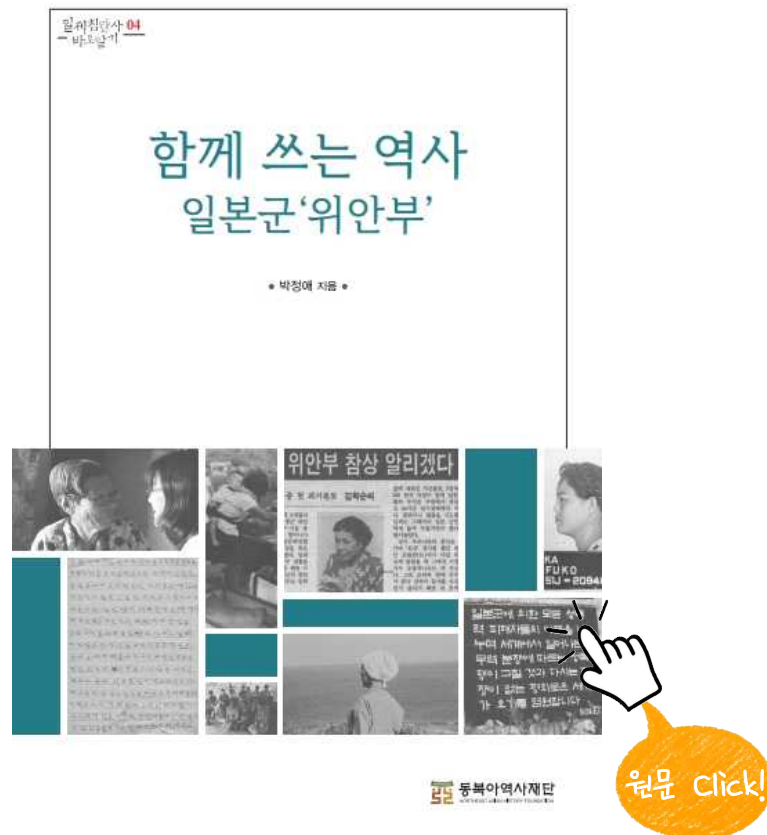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한일관계에서는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일제의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와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일본이 조선 침략의 명분으로 내세운 ‘동양평화’의 실체를 비롯해 독도 침탈과 강제 병합, 식량과 자원의 수탈, 민족 차별과 황국신민화 정책,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등 일제강점기의 실상을 폭넓게 다룬다. 또한 한일기본조약과 개인 청구권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식민지배의 책임이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일제 침탈의 전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며, 책임 있는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자료로 보는 우리 땅 독도 30장면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 145쪽 | 7,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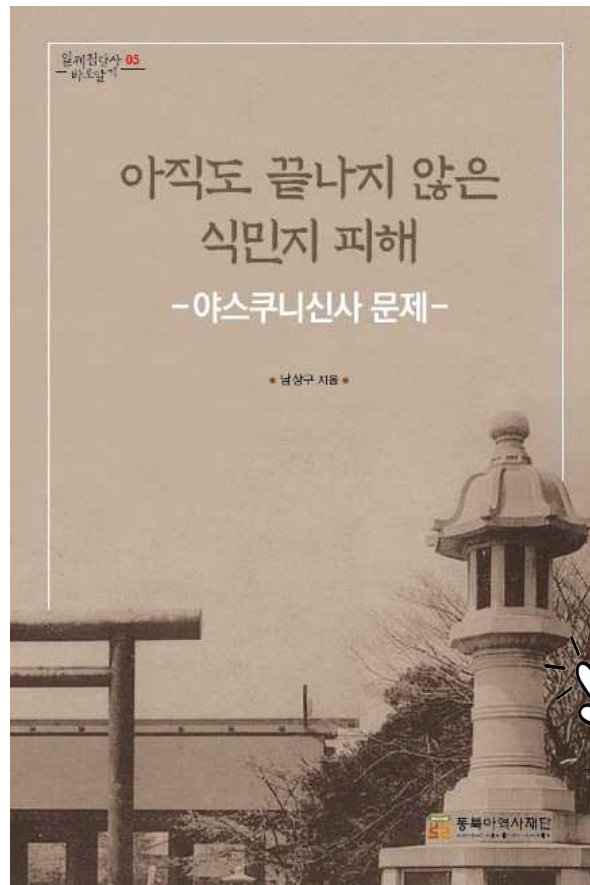
이 책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임을 보여 주는 자료와 사진을 담고 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연중 40일 이상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옛 기록과 오늘날의 사진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삼국사기』,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문헌비고』 등 우리 문헌과 지도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인식과 관할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은주시청합기』, 「태정관 지령」 등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부터 광복 이후 평화선 선언, 독도의용수비대와 독도경비대에 이르기까지 독도를 지켜 온 역사를 30개의 장면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땅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다.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 '위안부'

박정애 저 | 129쪽 | 7,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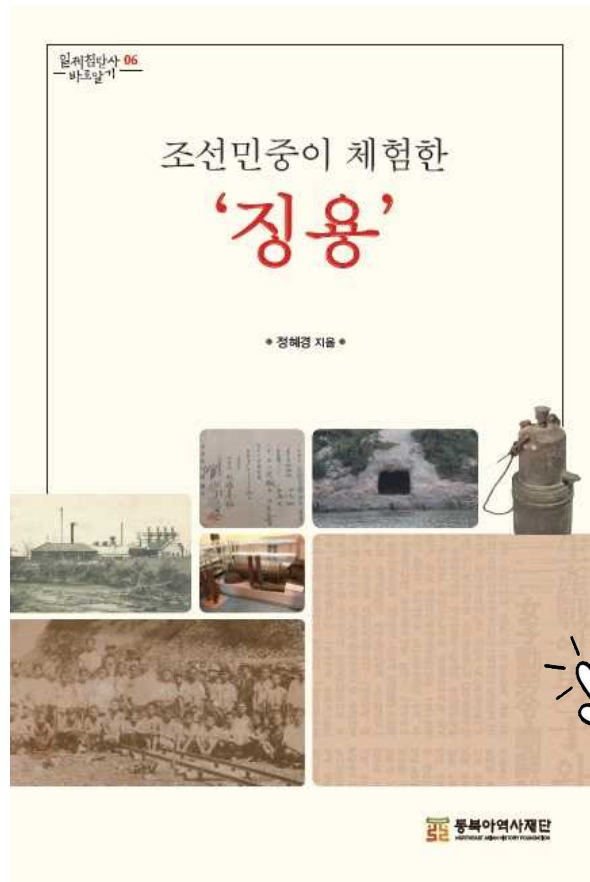
이 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 피해자의 구술과 명부, 가족과 공동체의 경험을 함께 살펴보면 피해를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과 관계, 회복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또한 김학순의 공개 증언과 피해자 인정 문제, 기억을 이어 온 연구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통해 증언이 기록이 되고 기록이 역사로 자리 잡는 과정을 보여 준다. 풍부한 사료와 증언,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적 실상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기록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나아가 생존자의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시대에 그 기억을 이어 가는 책임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식민지 피해 야스쿠니신사 문제

남상구 저 | 101쪽 | 7,000원 | 2020년 | ISBN 978-89-6187-59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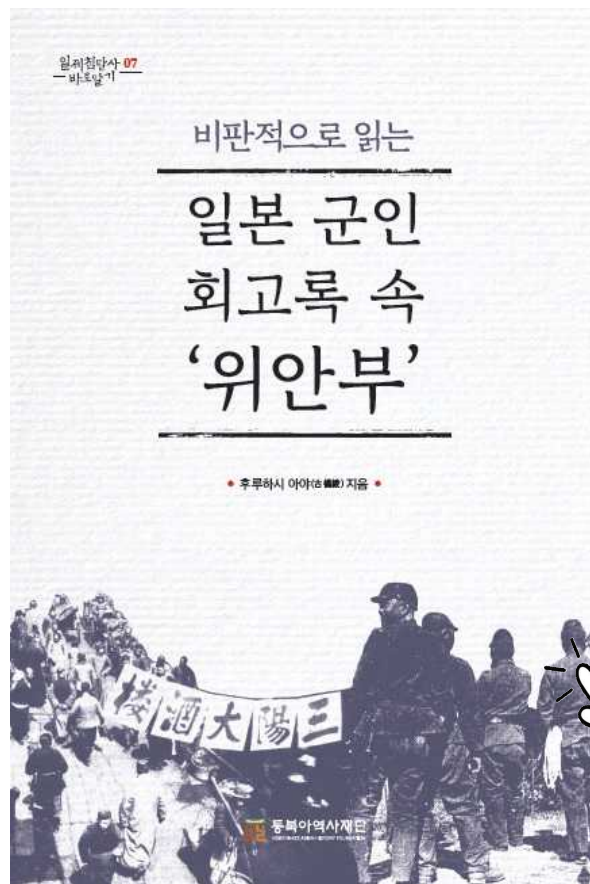
이 책은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를 통해 식민지배의 상처가 오늘날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야스쿠니신사의 기원과 일본의 침략전쟁에서 수행한 역할, 강제동원된 한국인 피해자와 A급 전범의 합사, 일본 총리의 참배 문제 등을 통해 침략전쟁과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역사 인식의 실체를 밝힌다.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들은 왜 야스쿠니신사가 합사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진정한 해방을 맞을 수 없다고 말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역사적 배경과 현재적 의미를 짚어 나간다. 또한 한국인 무단합사 철폐를 위한 소송과 국제 시민연대의 활동을 살펴보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의미를 되새긴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잊힌 목소리를 되살리고, 역사적 책임과 기억의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조선민중이 체험한 ‘징용’

정혜경 저 | 133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17-9

역사부정론자들과 일본 우익은 모든 조선인이 국민징용의 방식으로 동원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를 부정한다. 그러나 징용과 모집, 관일선, 근로보국대 등 형식이 달랐더라도 조선 민중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침략전쟁에 필요한 노동과 물자 생산에 동원했다는 강제성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책은 한반도와 일본, 중국과 만주, 남사할린, 중서부 태평양의 탄광과 광산, 군수공장, 토목·건축 현장 등에서 조선 민중이 겪은 강제노동의 실상을 담았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자료, 한국 정부가 조사한 약 16만 건의 노무동원 피해 자료를 바탕으로 강제동원의 전 과정과 피해 양상을 22개 주제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징용’의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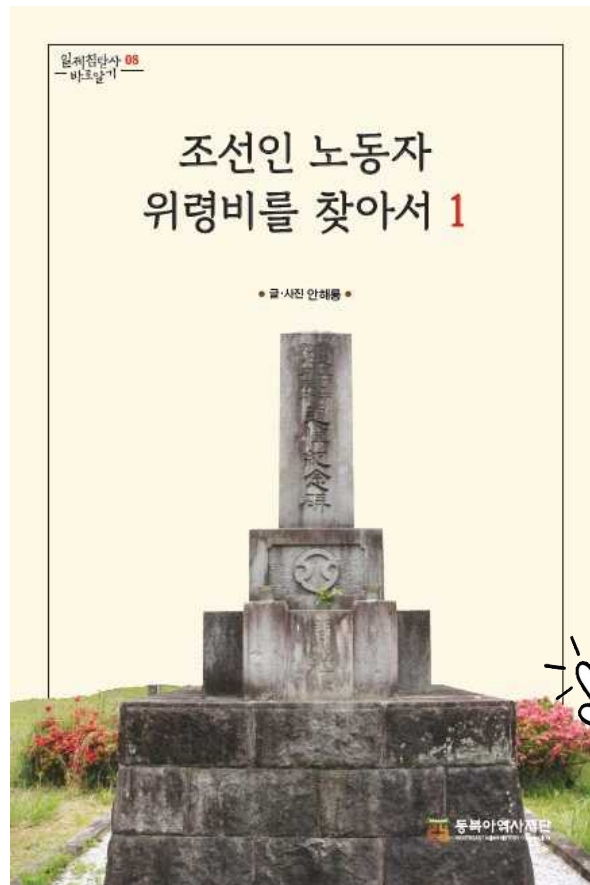


원문 Click!

비판적으로 읽는 일본 군인 회고록 속 ‘위안부’

후루하시 아야 저 | 87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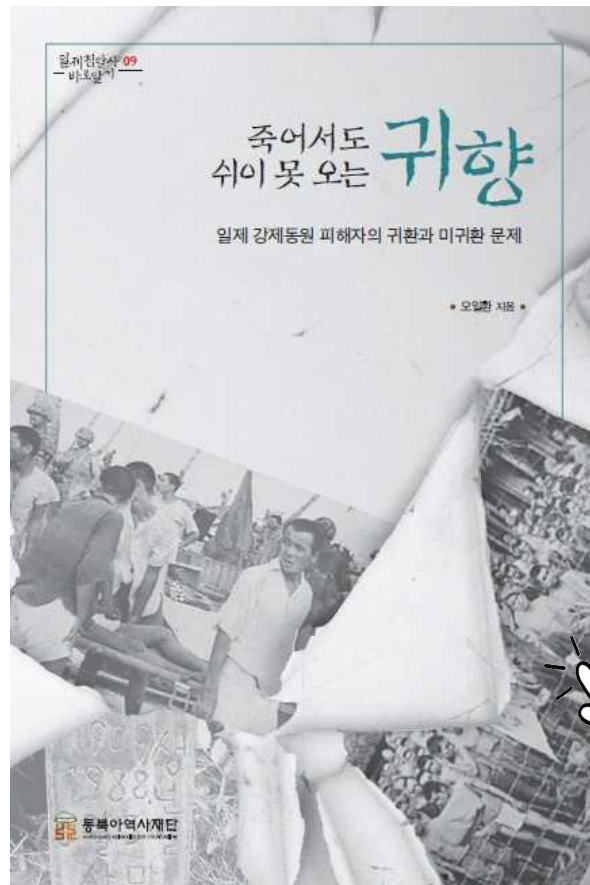
이 책은 일본 군인들이 남긴 회고록과 전쟁체험기를 바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새롭게 조명한다. 일본의 패전 이후 가해자들이 기록한 전쟁 경험 속 ‘위안소’와 ‘위안부’는 전쟁 중 평범한 일상이나 미화된 추억의 한 장면으로 재현되곤 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그것은 삶 전체를 파괴한 참혹한 폭력이었다. 이 책은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이용 실태가 가해자의 기록에서 어떻게 서술되고 회고되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기억하는 역사와 피해자가 경험한 현실 사이의 깊은 간극과 피해자들이 기록에서 배제되어 온 배경을 짚어 본다. 나아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해자 중심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바라보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역사적 정의를 모색하는 출발점을 제시한다.



조선인 노동자 위령비를 찾아서 1

안해룡 저 | 127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21-6

이 책은 일본 최북단 홋카이도에서 혼슈를 거쳐 규슈와 최남단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일본 전역에 흩어진 150여 개의 위령비와 추모비를 찾아다니며 역사에 온전히 기록되지 못한 조선인 노동자들의 이름과 삶을 되새긴다. 특히 공산과 탄전, 터널과 댐 공사장 등 일본 각지의 산업 현장에 남겨진 비석과 추모 공간을 통해 조선인들이 어떤 노동에 동원되었고 어떤 희생을 겪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위령비에 새겨진 이름과 비문, 건립 배경을 따라가며 누가 이들을 기억해 왔고 여전히 침묵 속에 남아 있는 역사는 무엇인지 묻는다. 이를 통해 일본의 근대화와 제국주의 이면을 마주하고, 오랫동안 망각되고 지워진 조선인 노동자들의 삶과 역사를 오늘의 기억으로 불러낸다. 나아가 추모가 과거를 기리는 데 머무르지 않고 역사적 책임을 성찰하며 기억을 이어 가는 실천임을 되새기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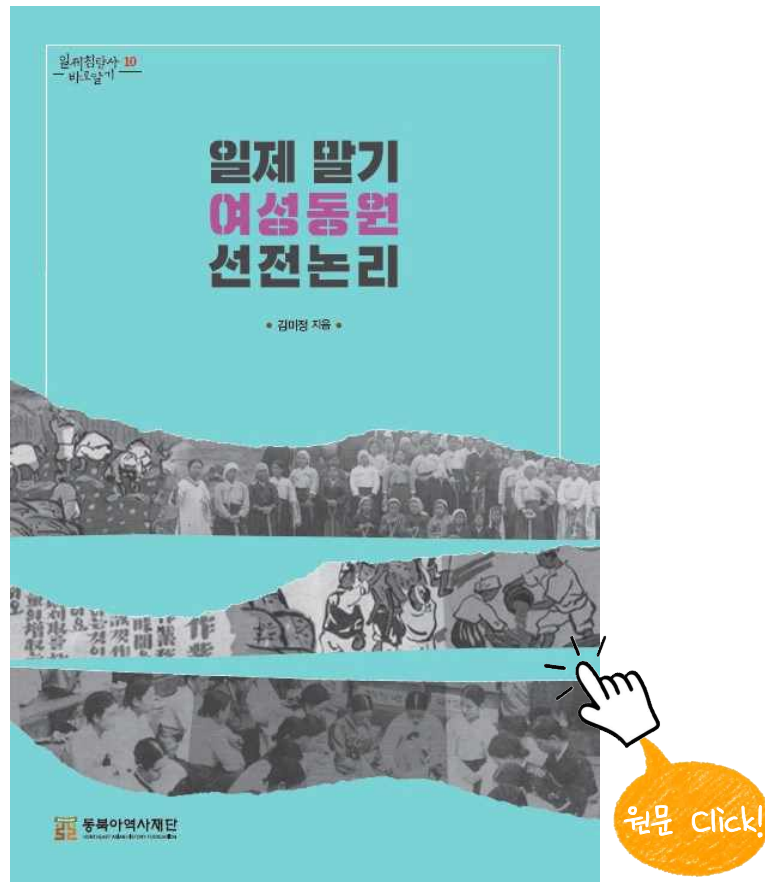


죽어서도 쉬이 못 오는 귀향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귀환과 미귀환 문제

오일환 저 | 145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9-89-6187-6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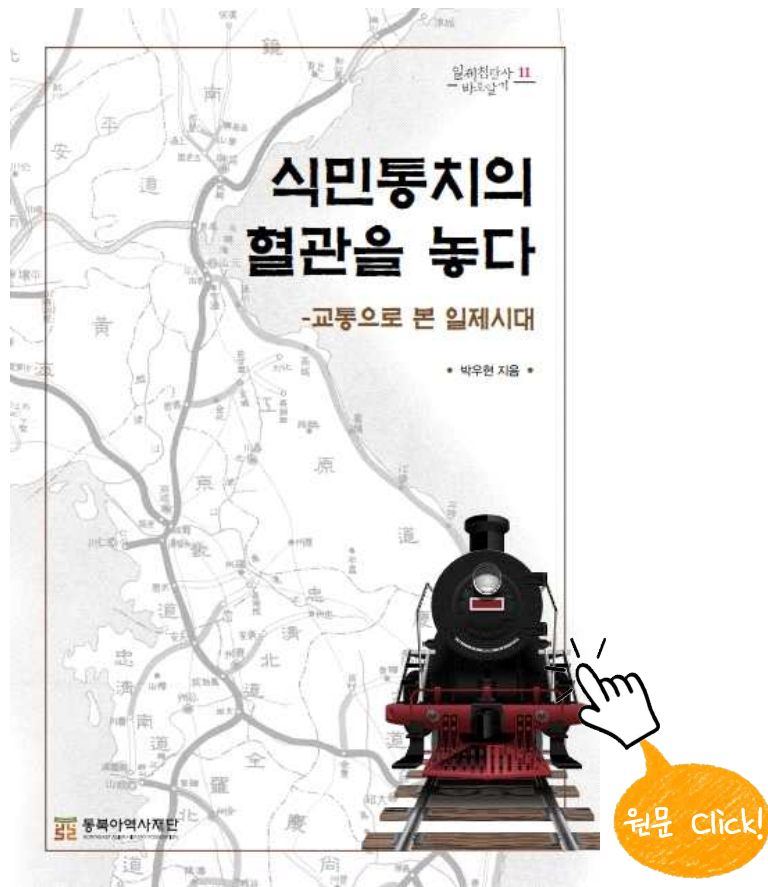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귀환과 미귀환 문제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일본과 오키나와, 사할린, 시베리아, 하이난섬을 비롯해 동남아와 태평양의 여러 지역에서 강제노동과 학대, 질병과 기아, 공습과 원폭, 해난 사고 등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삶을 되짚고, 연합군 포로수용소와 전범 재판을 거쳐 어렵게 귀환한 이들의 지난한 여정도 살펴본다. 또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낯선 땅에 묻힌 희생자들의 유해 봉환 문제와 오랜 세월 고통을 감내해 온 유족들의 현실을 조명한다. 이 책은 강제동원의 아픈 역사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게 한다.



일제 말기 여성동원 선전논리

김미정 저 | 96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22-3

일제는 침략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의 인적·물적 자원을 광범위하게 동원하였다. 남성들이 징병과 징용으로 끌려가고 각종 물자 공출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성들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머니들은 가정 안팎에서 각종 노무에 동원되었으며 먹고 입는 일상생활까지 철저히 통제 받았다. 당시 신문과 잡지 등 각종 매체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여성들의 동원을 독려하는 선전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이 책은 일제가 여성들에게 요구한 역할과 이를 뒷받침한 선전의 논리와 메시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조선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억압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침략전쟁에 내던져진 여성들의 삶과 경험,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을 되짚으며 잊혀진 목소리를 기억하고 그 역사적 의미를 깊이 성찰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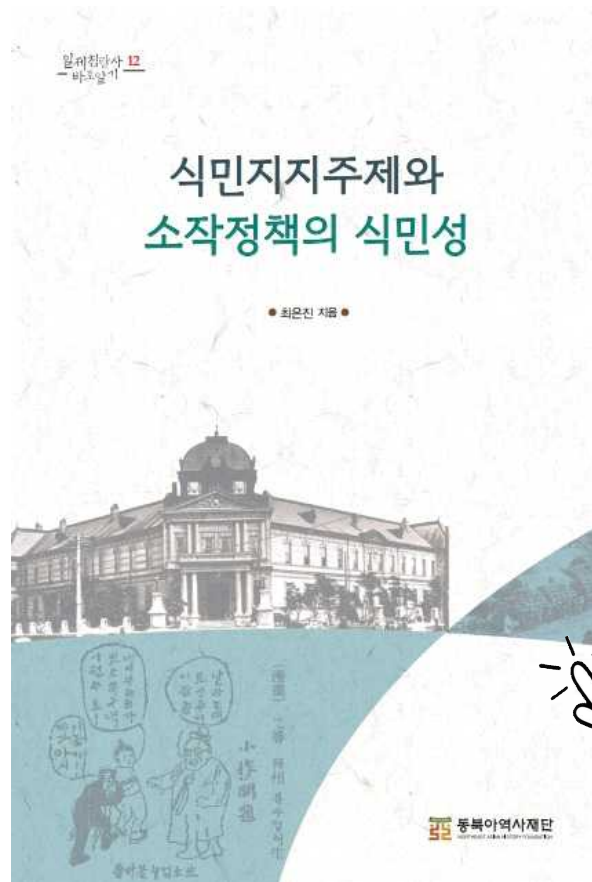
식민통치의 혈관을 놓다

교통으로 본 일제시대

박우현 저 | 159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32-2

이 책은 일제의 식민정책에 따라 구축된 조선 교통망이 조선 사회와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본다. 19세기 이후 철도와 항만, 증기선 등 근대적 교통수단은 개발의 상징인 동시에 제국주의가 자본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핵심 수단이었다. 경인·경부·경의철도를 비롯한 종관철도망과 도로, 항만, 항로는 조선을 위해서라기보다 일본의 대륙 침략과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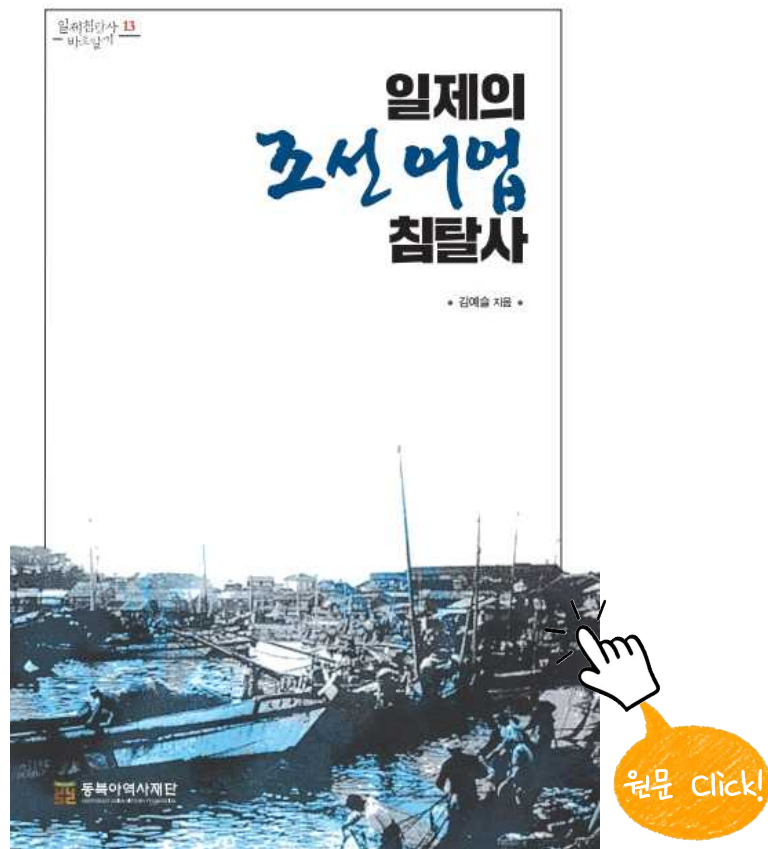
이 책은 철도 부설권을 둘러싼 경쟁과 조선인의 철도 건설 열망, 남만주철도의 위탁 경영과 북선 루트 개발 등 교통망 확대의 과정을 짚어 본다. 또한 철도가 장터와 도시의 흥망, 통학과 소운송업 등 일상 생활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고, 노동 현장의 차별과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도 함께 조명한다. 이를 통해 근대 교통을 둘러싼 개발과 침략의 이중성을 드러내고, 왜곡된 식민지상을 바로잡고자 한다.



식민지지주제와 소작정책의 식민성

최은진 저 | 136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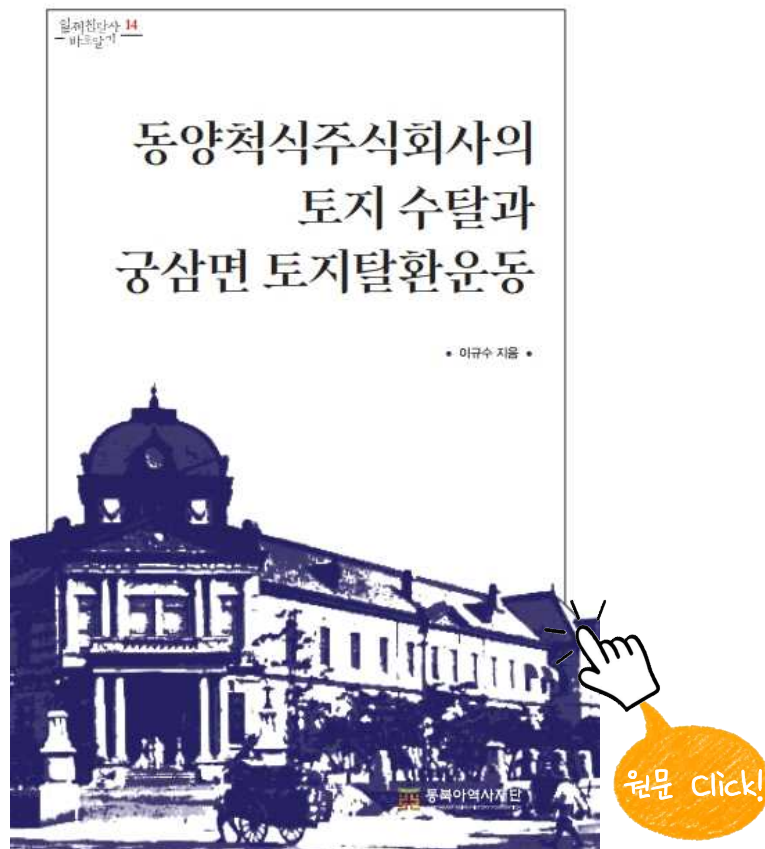
구한말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식민지지주제가 형성되고 일본인 지주들의 토지 침탈이 확대되었다. 이후 식민당국은 지주적 토지소유를 법제화하고 지주육성정책과 소작정책을 추진하며 지주소작관계를 통제하고 식민지 체제를 안정시키려 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몰락했고, 지주의 수탈과 소작문제가 심화되면서 소작쟁의와 농민조합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일제는 다양한 소장 정책을 통해 이를 관리하려 했지만, 농촌의 빈곤은 계속되었다. 전시체제기에는 농업과 지주경영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전쟁동원정책까지 더해지면서 농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이 책은 식민지 조선 농민들이 일제의 토지 침탈과 소작정책으로 몰락해 간 실태를 살펴보고, 식민지 경제의 핵심이었던 농업 분야에서 자행된 일제 침탈의 구조와 성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일제의 조선 어업 침탈사

김예슬 저 | 111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2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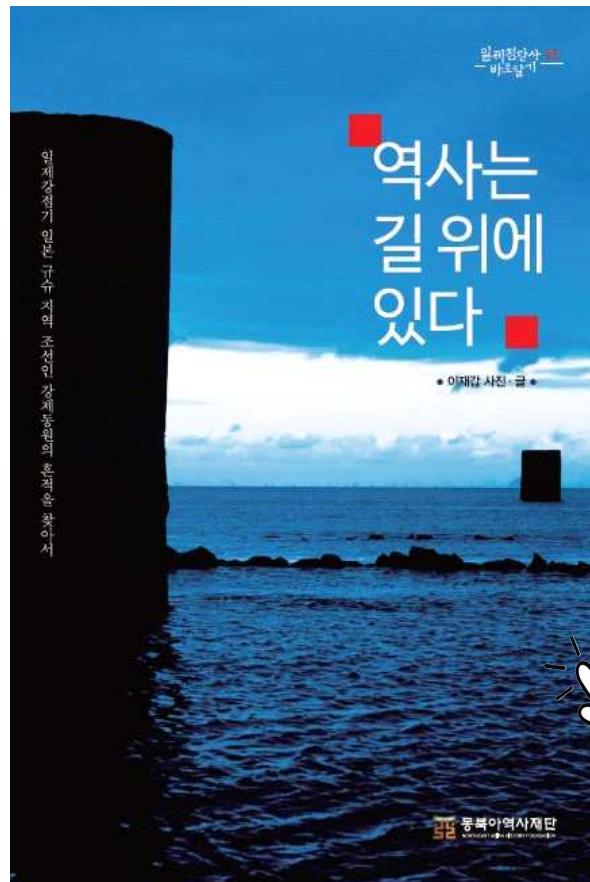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바다는 오랫동안 풍부한 수산자원을 제공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지만, 동시에 외세의 침략과 수탈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일제는 조선과 정식 통어(通漁) 조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일본 어민의 조선해 밀어(密漁)를 묵인했으며, 『조일통상장정』 체결 이후에는 조약을 빌미로 일본인의 조선해 진출을 적극 부추겼다. 이 책은 이러한 조선해 침탈 과정과 그 이면에 자리한 불공정한 구조를 살펴보는 한편, 제주도민의 어업권 수호 운동을 비롯해 삶의 터전인 바다를 지키기 위해 분투했던 조선인의 모습도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일제의 경제적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실상을 밝히고,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양사의 이면을 드러낸다. 나아가 일제의 조선해 침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바다가 지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수탈과 공삼면 토지탈환운동

이규수 저 | 109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31-5

동양척식주식회사(동척)는 1908년 일본 정부의 특권을 바탕으로 설립된 국책회사로, 조선의 토지를 확보하고 일본인 농업 이민을 정착시켜 식민지 지배 기반을 다지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토지 매수 과정에서는 수많은 분쟁이 발생했고, 이에 맞선 조선 농민들의 저항도 거세게 이어졌다. 동척은 식민지 지배의 상징이자 농민 저항의 표적이 되었으며, 막대한 운영 자금을 보유하고도 토지 매수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는 경작권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이 있었다. 이 책은 공삼면 토지탈환운동을 중심으로 식민 권력의 불법적인 토지 수탈과 토지 소유권을 되찾으려 했던 농민들의 투쟁을 조명하며, 한국 농민운동사에서 이 사건이 지닌 의미를 되새긴다.



역사는 길 위에 있다

일제강점기 일본 규슈 지역 조선인 강제동원의 흔적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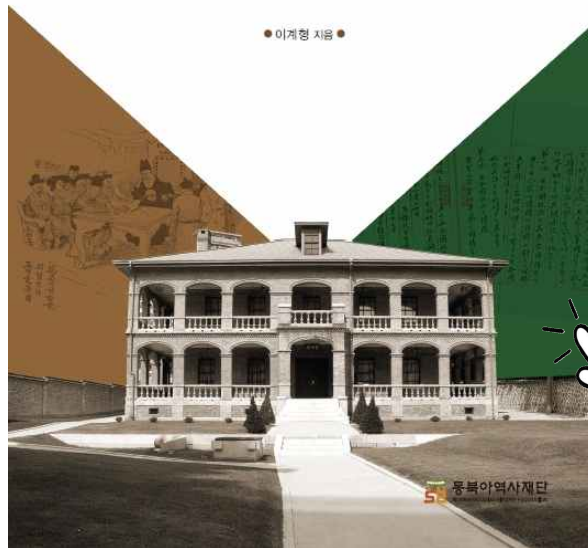
이재길 저 | 134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51-3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의 흔적을 찾아 한국과 일본 각지의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으로 기록한 책이다. 청일전쟁의 격전지였던 안성(성환)천을 시작으로 후쿠오카, 기타큐슈, 시모노세키항 주변, 지쿠호, 이즈카 등 강제동원의 역사가 남아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자료와 증언을 따라 찾아간 현장 가운데 많은 곳은 숲에 묻히거나 개발과 방치 속에서 옛 모습을 잃었지만, 사진은 그 공간에 남은 기억과 역사의 목소리를 현재로 불러낸다. 역사의 현장을 답사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일은 과거를 단순히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의미를 오늘의 시선으로 되새기는 작업이다. 이 책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마주하고, 그 역사를 오래 기억하며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일제침탈사 16
바로알기

한말 ‘한일조약’ 체결의 불법성과 원천무효

● 이계형 지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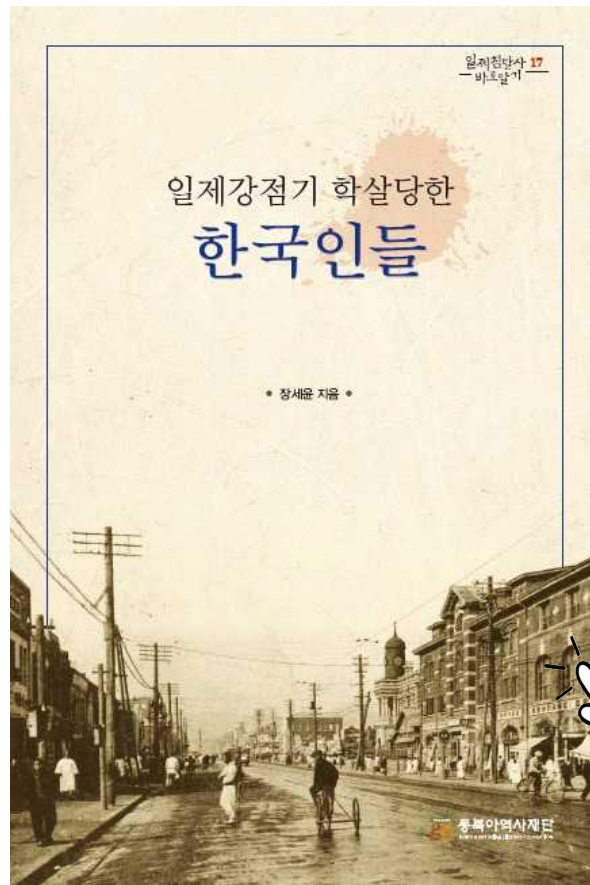


원문 Click!

한말 ‘한일조약’ 체결의 불법성과 원천무효

이계형 저 | 133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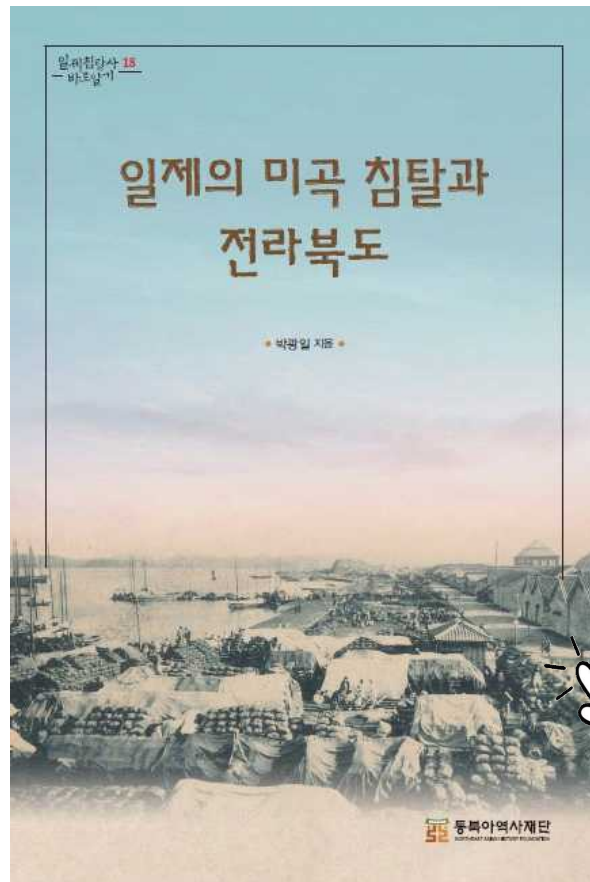
오늘날 한일 강제병합을 둘러싸고 한국에서는 일제의 강제적·불법적 지배로 자주적 근대화의 길이 좌절되었다고 보는 반면, 일본 일부에서는 병합이 당시 국제법상 합법적이었으며 한국의 근대화에도 기여했다는 이른바 ‘시혜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 책은 러일전쟁 이후 일제가 한국을 보호국화하고 국권을 침탈해 간 과정을 양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과 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을사늑약의 강제 체결과 한국인의 저항, 통감부 설치, 고종 황제 퇴위와 정미조약, 일본인 차관정치, 전개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이어 ‘한일병합조약’ 체결 과정에 나타난 강압성과 절차적 불법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조약의 무효 근거를 제시한다. 이 책은 일제의 국권침탈과 대한제국 멸망의 과정을 되짚으며, 오늘날 한일 과거사 문제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성찰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제강점기 학살당한 한국인들

장세윤 저 | 156쪽 | 7,000원 | 2021년 | ISBN 978-89-6187-675-9

이 책은 189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패망 전후까지 일제가 국내외 각지에서 자행한 한국인 학살과 각종 만행의 진상을 서술한다. 동학농민군과 의병에 대한 학살을 시작으로 3·1운동 탄압과 제암리·아우내 학살, 간도대학살과 연변 지역의 참변, 관동대 지진 당시 재일 조선인 학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식민 지배와 전쟁 과정에서 일제가 행한 폭력의 성격과 피해 실태를 드러낸다. 식민 지배의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청산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책은 학살당한 민중의 고통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실 규명 문제를 되짚으며, 왜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진다.



일제의 미국 침탈과 전라북도

박광일 저 | 116쪽 | 7,000원 | 2022년 | ISBN 978-89-6187-754-1

이 책은 일제강점기 전라북도에 남아 있는 미국 침탈의 현장을 찾아가는 답사 안내서다. 당시 치열하게 전개된 독립운동이 일제 침탈에 맞선 저항의 역사라면, 사람들이 무엇을 빼앗겼고 왜 맞서 싸웠는지 이해하려면 침탈의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제는 전라북도의 넓은 평야에 수리 시설을 확충하고 농업 생산을 늘리는 한편, 이를 식민지 수탈 체계에 편입해 쌀을 대량 반출했다. 익산에서는 교육기관과 산업시설을 연계해 식민지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으며, 군산은 철도와 항만을 기반으로 미국 반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았다. 이 책은 수리 시설과 익산의 교육·산업 현장, 군산 내항 등을 따라가며 ‘식민’과 ‘척식’이라는 말에 감추어진 경제 침탈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일제 침탈이 지역과 사람들의 삶에 남긴 상실과 저항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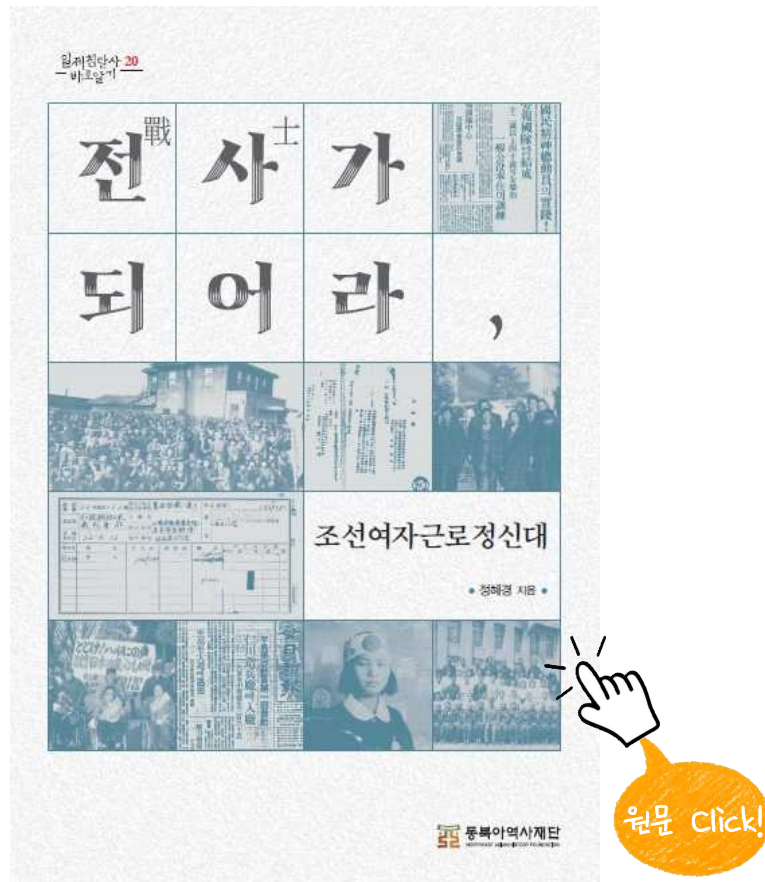


‘동화’라는 양날의 검

일제강점기 ‘내선결혼’ 정책과 그 실상

이정선 저 | 110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8-89-6187-84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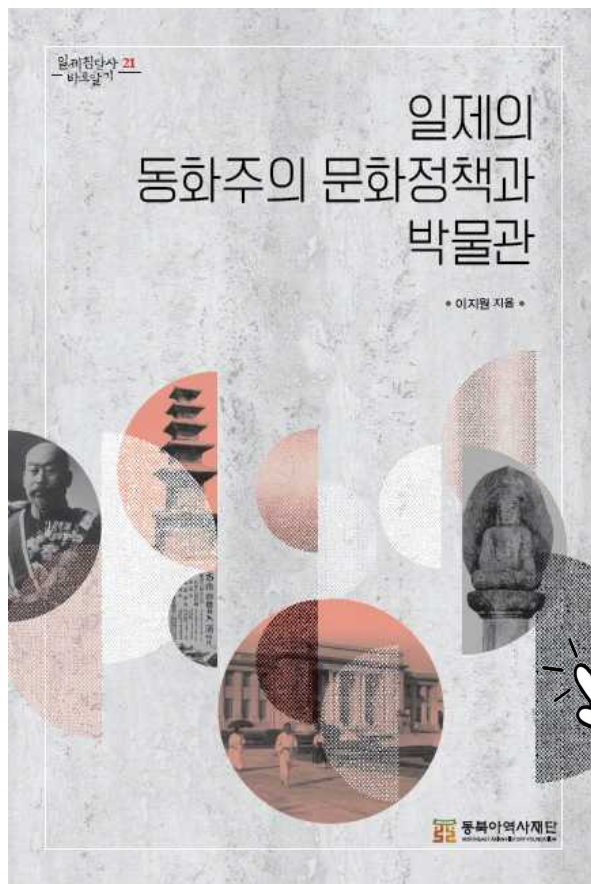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일본은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장려한 ‘내선결혼(內鮮結婚)’이었다.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이를 통해 두 민족이 친밀해지고 일본과 조선이 영원히 결합할 수 있다고 선전했지만, 실제 정책의 의미와 현실은 달랐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정책을 비롯해 결혼 당사자들의 동기와 인식, 가정생활, 이를 둘러싼 사회적 시선과 갈등을 다각도로 살펴본다. 또한 내선결혼이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인 동시에 민족의 경계를 흔들어 식민 통치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이었음을 밝힌다. 나아가 정책의 파탄과 그 이후까지 추적하며, 민족·계층·성별의 차이가 교차한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전사(戰士)가 되어라,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정혜경 저 | 115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6-6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의 소녀들이 ‘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어 군수공장 등에서 가혹한 노동과 착취를 당했다. 그러나 정확한 동원 규모와 관련 기업의 현황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배움과 취업에 대한 기대를 품고 고향을 떠났지만, 혹독한 노동을 겪은 뒤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귀국 후에도 가족과 사회의 외면 속에서 오랜 침묵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혼동되면서 그 실상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1990년대 초부터 일본 시민과 재일동포들의 도움을 받아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요구했고, 2013년부터는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을 이어 나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 책은 조선여자근로정신대의 동원 규정과 과정, 노동 실태와 피해 사례를 밝히고, 인간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세상과 법정의 문을 연 피해자들의 용기와 투쟁을 조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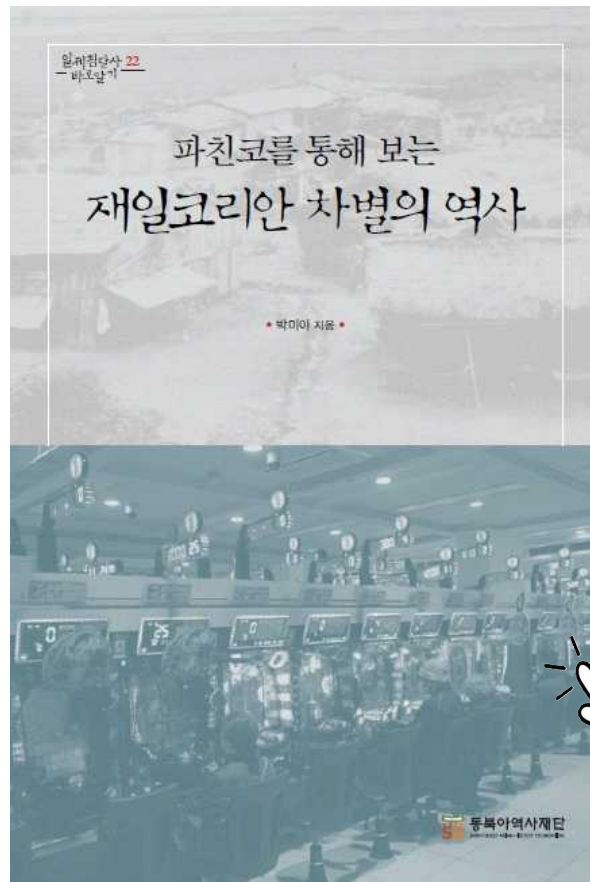


원문 Click!

일제의 동화주의 문화정책과 박물관

이지원 저 | 108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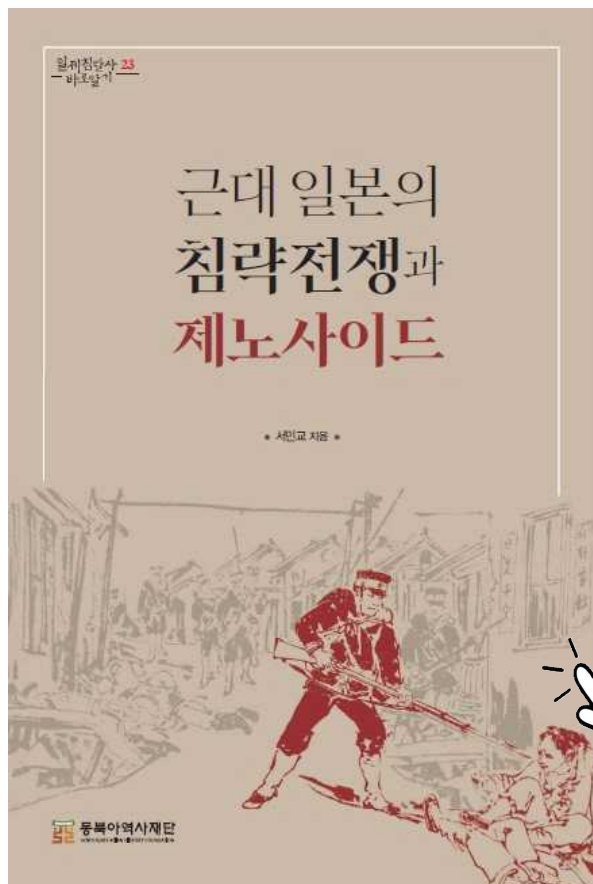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가 공공박물관을 세우고 이를 식민지 문화 지배에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살펴본다. 겉으로 박물관은 근대 문명화의 성과를 보여주는 공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 중심의 역사관을 퍼뜨리고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육과 선전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박물관은 1920년대 ‘문화정치’ 아래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전쟁이 심해진 뒤에는 사상통제와 국민 동원에도 활용되었다. 일제는 문화재와 전시물을 장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인의 역사 인식과 정서까지 바꾸려 했다. 이 책은 식민지 공공박물관을 문화침탈의 현장으로 다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 들여 온 근대 문화시설의 이면을 오늘의 시각에서 성찰하게 한다.



파친코를 통해 보는 재일코리안 차별의 역사

박미아 저 | 93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3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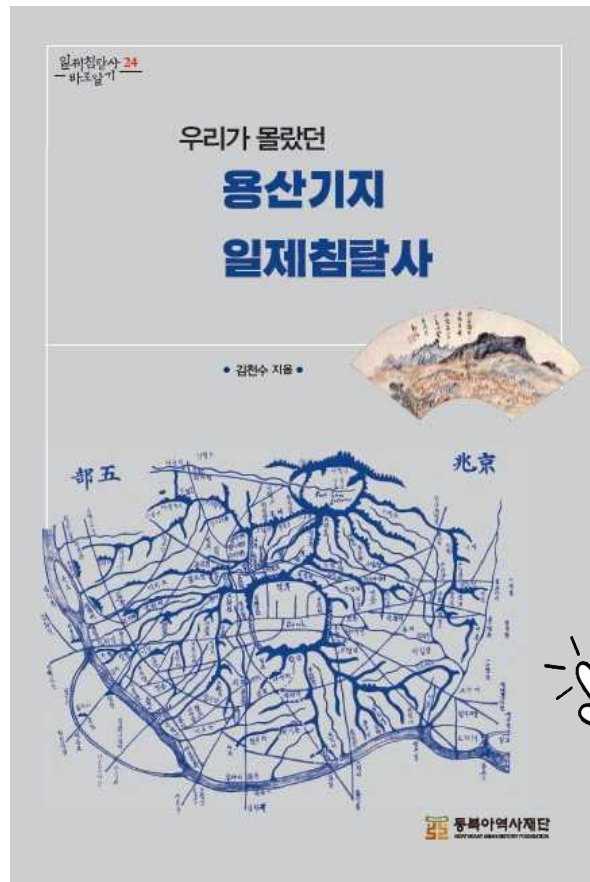
파친코는 일본 패전 이후 대중적 오락으로 자리 잡으며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재일코리안의 삶과 역사가 깊이 얽혀 있다. 이 책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일본 도항과 정착 배경에서 출발해, 해방 이후 귀환과 잔류, 암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 환경과 공동체의 일상을 살펴본다. 또한 전후 파친코 산업의 성장 과정과 이를 주도한 재일코리안 사업가들, 관련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의 삶을 조명한다. 한편 파친코를 둘러싼 사건과 사고가 재일코리안에 대한 비난과 차별로 이어진 현실도 함께 보여준다. 이를 통해 화려한 산업 성장 뒤에 가려진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구조를 이해하고, 재일코리안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어져 왔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게 한다.



근대 일본의 침략전쟁과 제노사이드

서민교 저 | 78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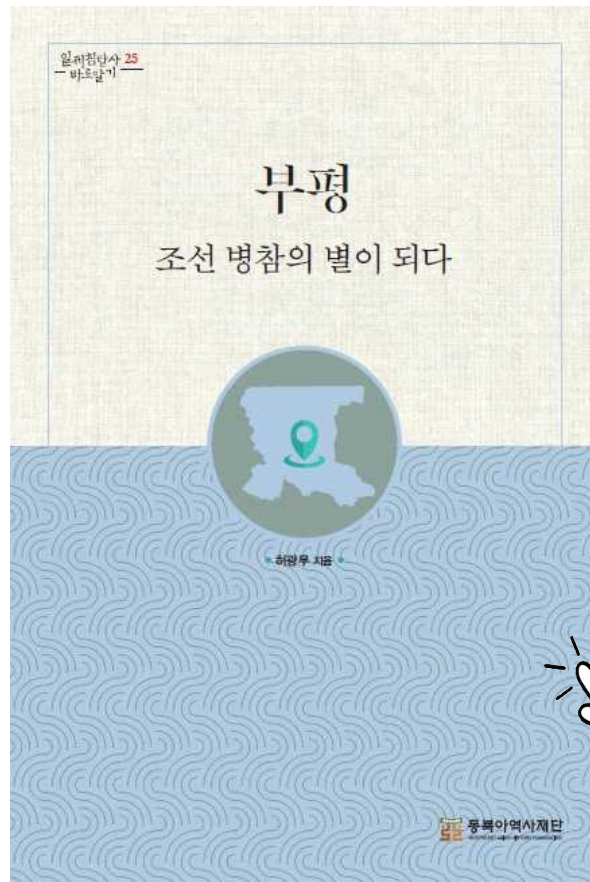
제노사이드는 민족·종족·인종을 의미하는 ‘제노스(genos)’와 살인을 뜻하는 ‘사이드(cide)’의 합성어로, 고의 또는 제도적으로 특정 민족·종족·인종·종교 집단의 전체나 일부를 파괴하는 ‘집단학살’ 범죄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 책은 1894년 청일전쟁부터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까지 이어진 근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 속에서 발생한 집단 살해 양상을 제노사이드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중국 뤼순 학살과 동학농민군 살육, 후기 의병 탄압, 경신참변과 난징 대학살은 물론 오키나와 전투와 이오 지마 전투까지 폭넓게 다루며, 일본 군대가 조선인과 중국인뿐 아니라 자국민과 군인에게 가한 폭력의 실태도 함께 조명한다. 이를 통해 일본 제국주의가 남긴 역사적 상처와 제노사이드의 실체를 이해하고, 과거의 비극을 오늘의 시각에서 성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몰랐던 용산기지 일제침탈사

김천수 저 | 138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3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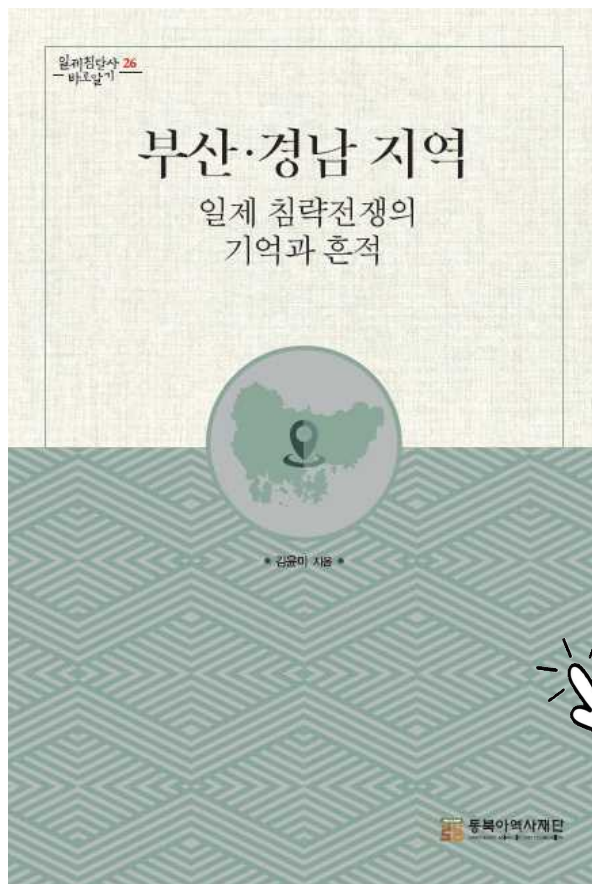
용산기지는 오랫동안 우리에게 ‘금단의 땅’이었다. 청군과 일본군, 미군이 차례로 주둔하며 군사기지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22년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용산기지 일부가 개방되면서, 이곳은 ‘용산공원’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이 책은 둔지산 일대에 형성되었던 마을과 주민들의 삶을 살펴 보고, 일제가 군용지를 강제로 수용해 용산기지를 건설·확장한 과정과 이에 맞선 주민들의 저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또한 조선군사령부 청사와 총독 관저, 일본군 병영과 용산위수감옥, 방공호 터널 등 기지 안에 남아 있는 일제 침탈의 흔적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용산기지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역사가 지닌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부평 조선 병참의 별이 되다

허광무 저 | 150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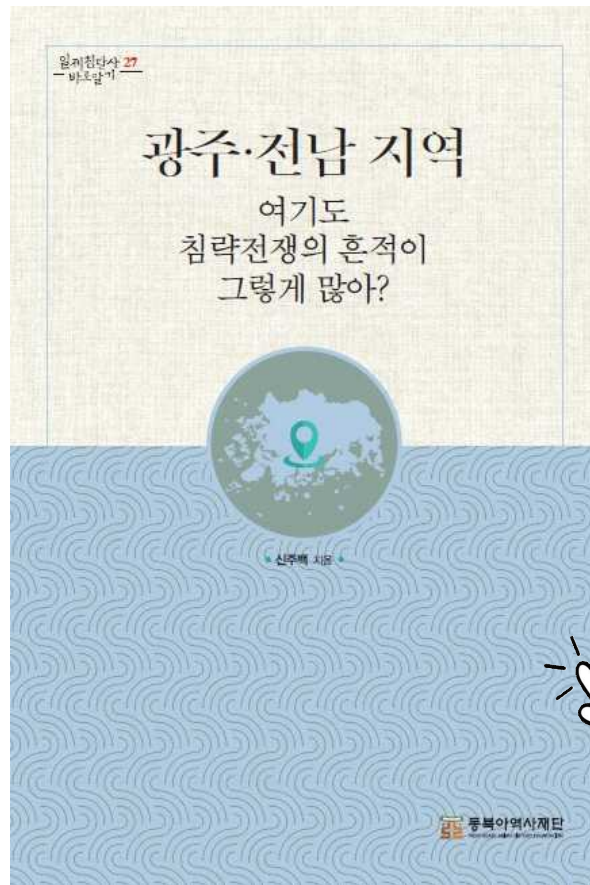
인천 부평은 일제가 아시아태평양전쟁 수행에 필요한 병기와 군수품, 화약류 등을 제조·수리하던 인천육군조병창이 있던 곳이다. 식민지 조선 병참기지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해방 이후 미군 주둔지로 활용되며 한반도 냉전의 역사까지 간직하게 되었다. 이 책은 문서와 사진, 증언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천육군조병창이 부평에 들어선 배경과 군수기업의 집결, 노동자 주택과 사택의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모집과 관할선, 징용을 통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시동인’, ‘내선용화’라는 구호 뒤에 감춰진 민족 차별, 함흥산 지하공장 건설과 노동 착취의 실태를 밝힌다. 아울러 해방 이후 부평의 변화까지 추적하며, 이곳이 식민지 전쟁 체제의 핵심 거점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인천육군조병창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 인식과 평화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부산 · 경남 지역 일제 침략전쟁의 기억과 흔적

김윤미 저 | 132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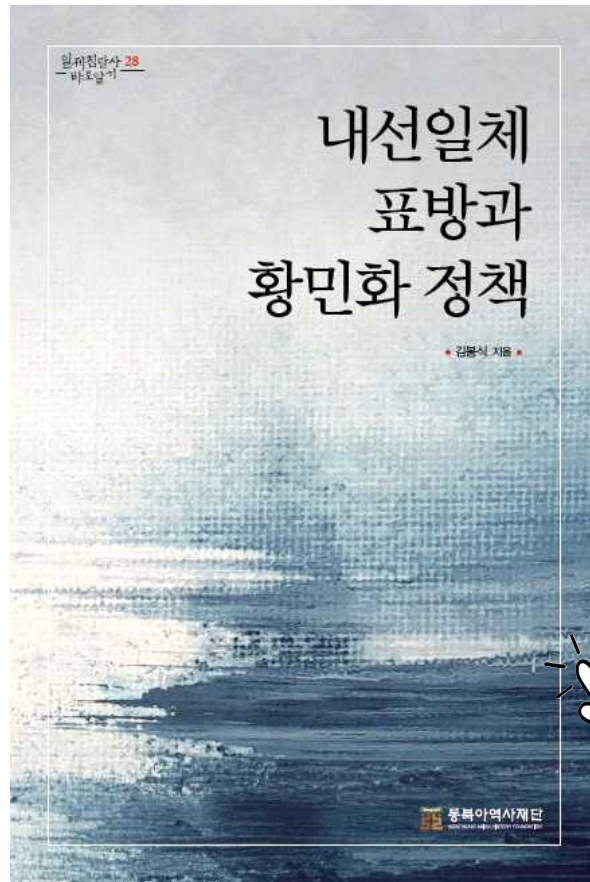
대한해협은 경제적 · 군사적 ·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해역으로,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러일전쟁, 아시아태평양전쟁 등 한국사의 주요 전쟁이 전개된 곳이다. 일본은 대한해협을 장악하려고 거제도 송진포와 가덕도, 진해 등에 군항과 육군 요새를 건설했으며, 그 흔적은 부산과 마산, 울산, 밀양, 통영, 남해 등 남해안 곳곳에 남아 있다. 이 책은 일본군 병영과 관련 시설이 밀집된 부산, 마산, 진해 등을 답사하며 전쟁유적을 소개하고 있다. 필자가 직접 촬영한 사진과 일본 측 자료, 전쟁 유적을 기억하는 구술자의 증언을 통해 현장의 역사를 보여주며, 해방 이후 일본군의 귀환과 미군정의 시작도 함께 다룬다. 남해안에 남은 전쟁 유적을 돌아보며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류 공영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광주 · 전남 지역 여기도 침략전쟁의 흔적이 그렇게 많아?

신주백 저 | 110쪽 | 7,000원 | 2023년 | ISBN 979-11-7161-0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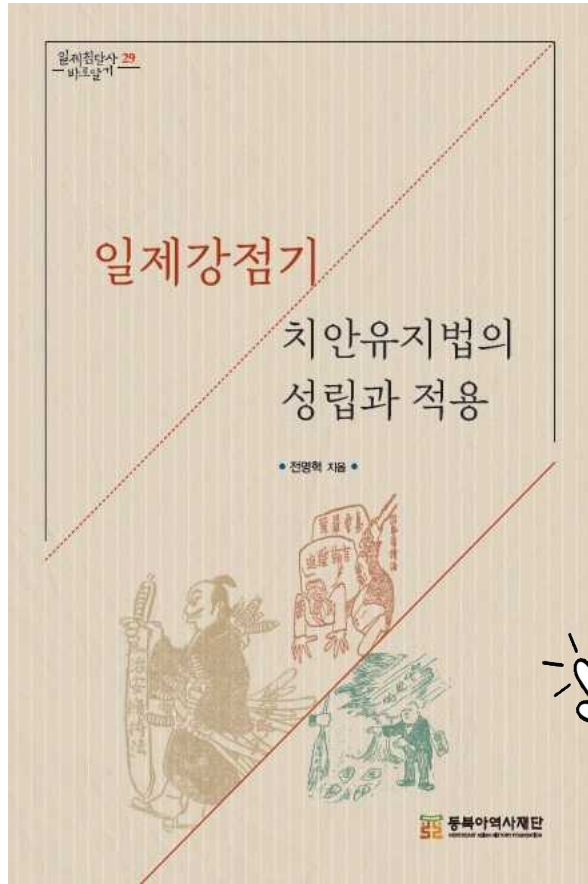
광주, 목포, 여수 등 광주·전남 지역에는 일본군의 침략전쟁과 관련된 유물과 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아시아태평양전쟁, 특히 1945년 ‘본토결전’ 준비 과정에서 조성된 동굴과 비행장, 요새와 수상기기지 등이 있다. 이 시설들은 강제 동원된 수많은 조선인의 노동력이 착취된 결과물이지만,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건설했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 책은 광주·전남 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일본군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광주 항공기지와 여수 요새, 목포와 인근 섬의 군사기지, 무안 비행장 등이 만들어진 배경과 강제동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또한 일본의 패전과 해방 이후 군사시설의 변화와 일본군의 귀환 과정도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단절된 기억을 연결해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내선일체 표방과 황민화 정책

김봉식 저 | 90쪽 | 7,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9-3

‘내선일체’는 미나미 지로 총독이 내세운 일제 식민지 조선의 기본 통치 방침으로, 조선인을 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편입하기 위한 황민화 정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이 책은 ‘내선일체’의 허구성을 밝히고, 황민화 정책이 일상에 침투한 과정을 살펴본다. 황국신민서사와 신사참배를 통한 충성 강요, 일본어 상용과 조선어 말살, 창씨개명과 같은 정책들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조선인의 언어와 이름, 생활과 정체성을 일본식으로 바꾸려는 통치 장치로 작동했다. 천황의 은혜를 내세운 황민화 정책은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 논리였으며, ‘내선일체’ 역시 일본의 침략과 식민 지배 책임을 은폐하려는 이데올로기였다. 이를 통해 일제가 조선인의 삶을 통제하고 동화를 강요한 식민 통치의 구조와 본질을 밝히며, 그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한다.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의 성립과 적용

전명혁 저 | 88쪽 | 7,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6-2

치안유지법은 1925년 5월 공포된 이후 개정을 거듭하면서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작용했다. 치안유지법에는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제 부인’이라는 조항을 두었는데 ‘국체 변혁’은 독립운동, ‘사유재산제부인’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정형화를 가져왔다. 1928년 ‘개정 치안유지법’에는 ‘목적수행죄’를 신설했다. 이 조항은 결사에 가입한 자뿐 아니라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 즉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를 꾀하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돕는 모든 행위를 검거 대상으로 한 것이다. 더 나아가 1941년 ‘신치안유지법’에는 ‘예방구금제도’를 두어 조선 민중의 고유한 영혼을 빼앗고 일본 정신을 주입시켜 민족의 존엄성을 말살시키려 했다. 이 책은 일제시기에 도입된 치안유지법이 본질적으로 식민통치체제의 유지를 위한 폭력적 장치였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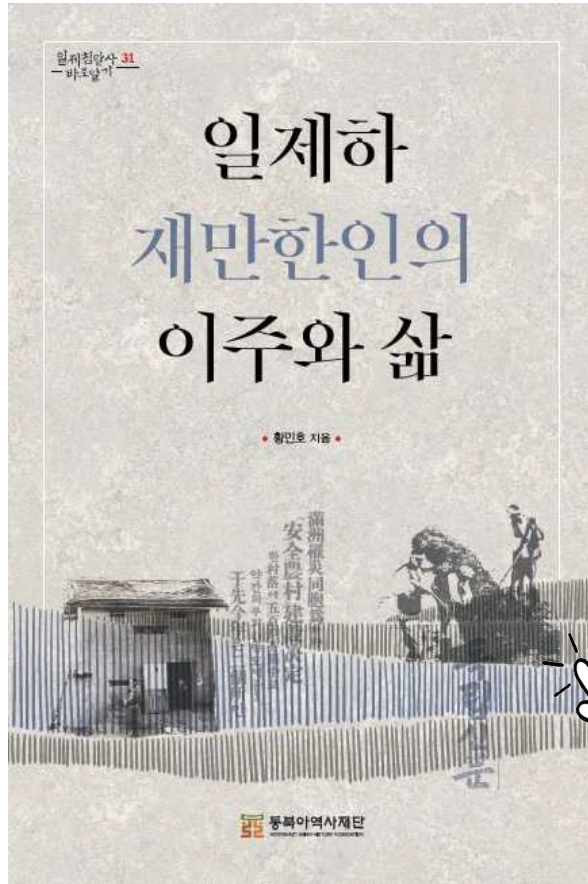


원문 Click!

학교는 늘었지만 조선총독부 교육정책의 실체

김광규 저 | 124쪽 | 7,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2-4

일제강점기에는 초·중등학교가 증설되고 대학과 전문학교도 문을 열었지만, 기회균등이나 공적 관리, 교육의 자율성과 같은 근대 교육의 공공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책은 근대 개혁기 신교육의 확산과 교육구국운동에서 출발해, 일본의 교육 침투와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 및 제도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특히 여러 차례 개정된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억압, 초·중등학교 진학의 제약, 실업학교와 사범학교의 민족 차별, 대학과 전문학교 교육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또한 일본인 교원 우대, 여성의 교육 소외, 일제 말 학생들의 노동 동원 등 차별과 통제의 실상도 함께 다룬다. 이를 통해 조선인을 ‘충량한 신민’으로 육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조선총독부 교육정책의 식민성과 비교육성, 그 역사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일제하 재만한인의 이주와 삶

황민호 저 | 86쪽 | 7,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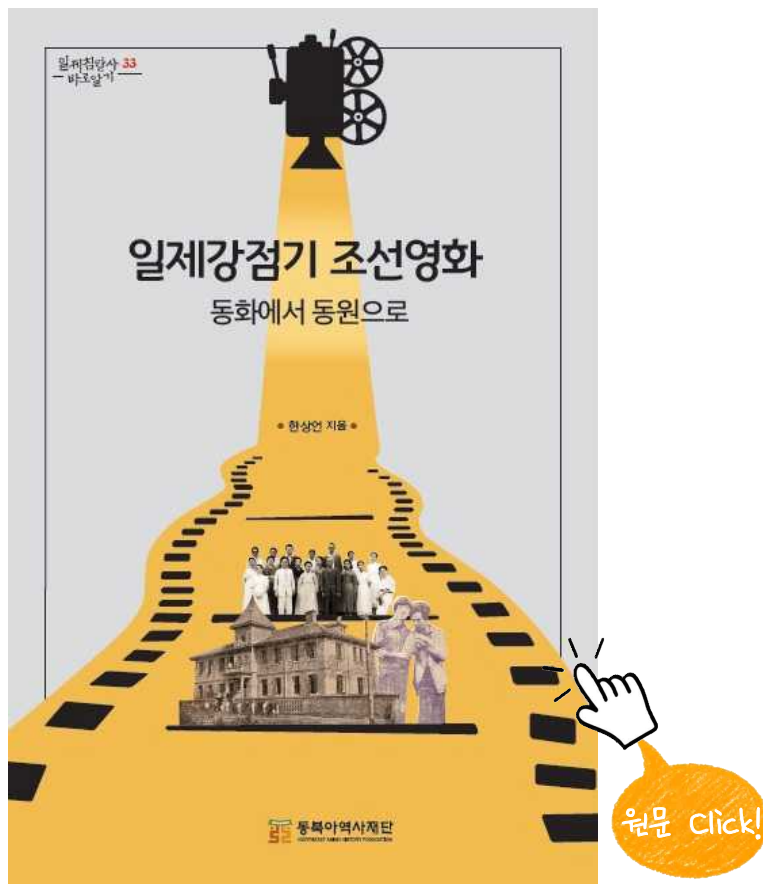
이 책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 만주로 이주한 한인들의 정착 과정과 삶의 조건을 살펴보고, 식민지 지배와 전쟁 속에서 이주가 점차 강제성을 띠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조명한다. 한인들은 수전경작을 통해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확장해 갔지만, 일제의 탄압과 경신참변, 중국 당국의 한인구축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맞서 한인사회가 전개한 자치운동과 저항의 양상을 살펴보는 한편, 일제의 만주 침략 이후 안전농촌과 집단부락 조성, 개척민 이주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재만한인의 이주와 정착이 자발적 생존 노력과 식민 권력의 강제동원이 뒤얹힌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식민지 시대 동아시아의 복잡한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식민지, 감옥에 갇히다

박경목 저 | 110쪽 | 7,000원 | 2024년 | ISBN 979-11-7161-1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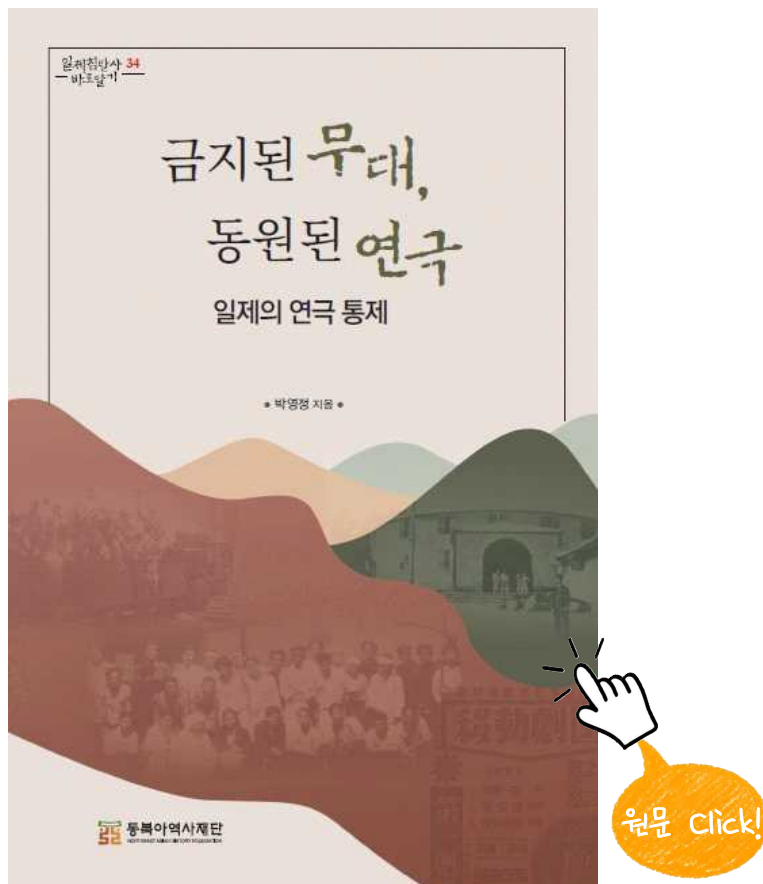
감옥은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이지만, 일제강점기에는 식민 통치를 유지하고 항일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일제는 보안법과 출판법, 치안유지법 등을 앞세워 독립 운동가들을 ‘정치범’과 ‘사상범’으로 규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했다. 이 책은 대한제국기 감옥 개혁의 좌절과 통감부의 감옥 설치에서 출발해, 수감자 증가에 따른 감옥의 증설과 사상범 전용 감옥의 운영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수형기록카드를 통해 독립운동가들이 사상범으로 관리된 실태를 밝히고, 철저한 감시와 통제 아래 이루어진 의식주 생활과 노역, 사상통제와 전향 강요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식민지 감옥이 단순한 형벌 시설이 아니라 일제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뒷받침한 핵심 통치 장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영화 동화에서 동원으로

한상언 저 | 116쪽 | 7,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42-0

조선영화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을까. 일제강점기 조선에는 극장과 활동사진관이 들어서고 연속영화, 변사 등이 인기를 끌면서 영화 흥행업이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식민지 권력과 일본 영화자본의 지배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책은 영화의 유입과 극장 설립, 재조일본인 흥행업자와 조선총독부 등이 영화 제작과 유통에 관여한 과정을 살펴본다. 아울러 《아리랑》의 성공과 카프영화, 발성영화의 등장 등 조선 영화인들의 분투도 함께 조명한다. 그러나 중일전쟁 이후 영화는 침략전쟁을 선전하고 대중을 동원하는 수단으로 재편되었으며, 조선영화는 일본 영화산업에 종속되었다. 이를 통해 식민지 지배기구의 수탈적 활동과 조선영화가 처한 구조적 한계, 침탈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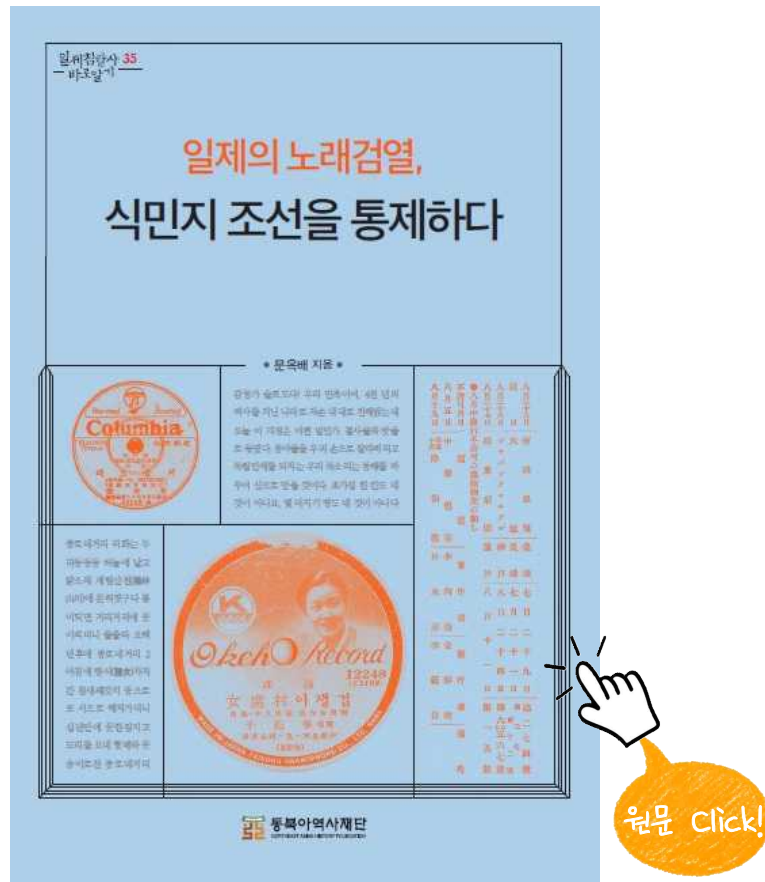


금지된 무대, 동원된 연극

일제의 연극 통제

박영정 저 | 106쪽 | 7,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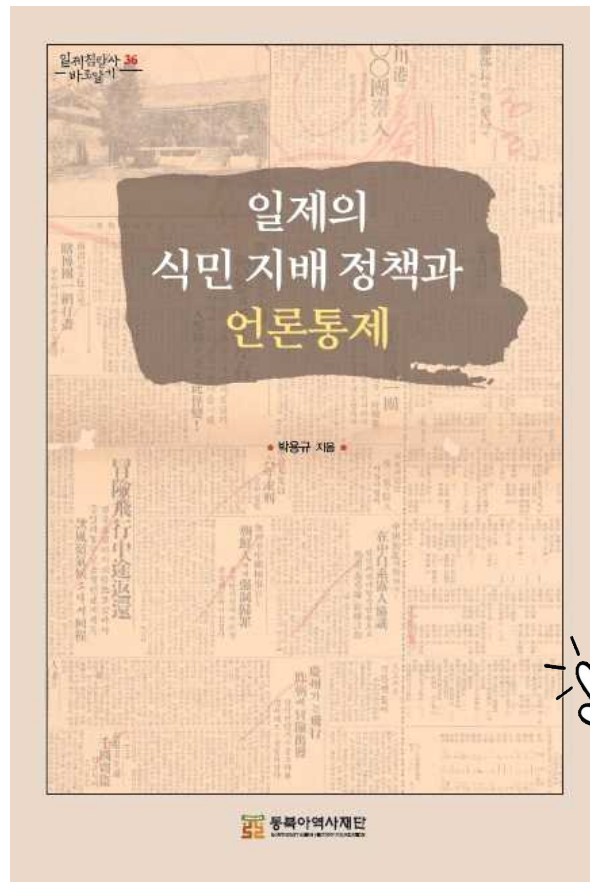
우리 근대극은 극장의 등장과 함께 출발했지만, 식민지 시대를 거치며 일제의 검열과 통제 속에서 발전해야 했다. 일제는 풍속 개량을 내세워 전통 연희와 신파극을 길들이고, 작품 검열과 통제 법령을 통해 극단 활동과 연극운동을 제약했다. 전시 총동원 체제 강화 후 관련 협회를 조직하고 ‘국민연극’의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며, 연극무대를 전쟁 동원과 생산 증대를 선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 책은 검열과 진흥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연극 통제의 제도와 실재를 살펴보고, 이른바 ‘문명’의 이식이 식민지 문화 침탈로 이어진 과정을 밝힌다. 이를 통해 우리 근대극이 겪어야 했던 시대적 제약과 시련을 조명하고, 식민지 시기 연극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안내한다.



일제의 노래검열, 식민지 조선을 통제하다

문옥배 저 | 110쪽 | 7,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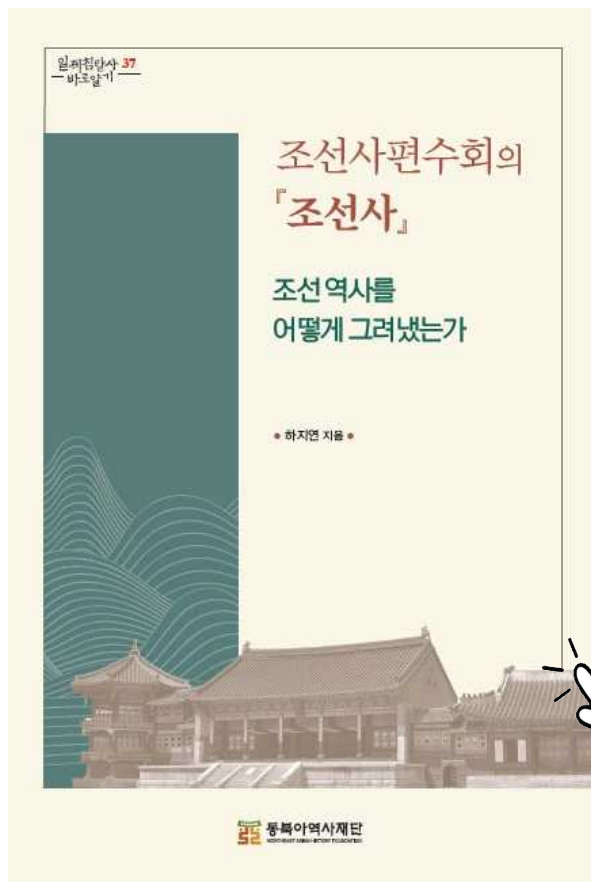
일제는 식민지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사상통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대중의 감정과 생각에 널리 영향을 미치는 노래를 중요한 ‘사상도구’로 인식했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 고등경찰과 경무국 도서과를 중심으로 노래 검열의 주체와 목적, 작동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일제가 법과 제도를 앞세워 노래책과 음반, 공연을 검열하고, 가수와 공연예술인의 활동까지 통제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힌다. 전쟁이 확대되면서 일제는 음반과 공연에 대한 검열을 더욱 강화하고, 창작자와 대중이 스스로 표현을 제한하도록 만들었다. 이 책은 조선총독부의 문서와 실제 처분 사례를 통해 노래와 공연예술이 통제된 과정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무형의 문화침탈이 이루어진 구조와 논리를 이해하고, 문화와 권력이 맞닿는 지점을 새롭게 성찰하게 한다.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과 언론통제

박용규 저 | 90쪽 | 7,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52-9

이 책은 일제의 언론통제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언론·사상통제법과 매체 발행 허가제, 신문·잡지 검열, 방송원고 심사와 감청,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의 실태를 살펴본다. 또한 조선어 신문의 폐간과 잡지 통폐합, 친일 잡지 발간, 조선총독부 기관지와 선전방송의 강화 과정을 통해 언론 장악이 어떻게 제도화되었는지 밝힌다. 이를 통해 당시 언론이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닌 조선을 관리하고 여론을 통제하며 식민 통치를 선전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단파방송 청취 사건과 언론인 처벌 사례를 통해 언론인들이 겪어야 했던 억압과 선택의 현실, 그 과정에서 남겨진 상처를 따라간다. 이로써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시대’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주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지닌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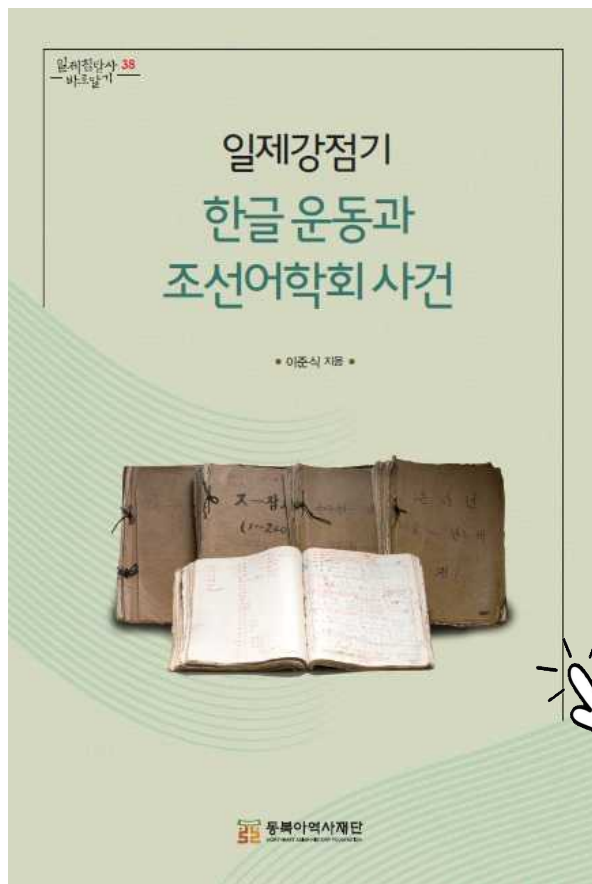


원문 click!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조선 역사를 어떻게 그려냈는가

하지연 저 | 148쪽 | 7,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53-6

조선사편수회는 조선총독부 고위 관료를 정점으로 일본인과 조선인 연구자를 동원해 역사를 편찬한 관제 조직이다. 이 사업은 통감부가 규장각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옛 제도와 역사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일본 학자들이 편찬 방향과 자료 선택을 주도했고, 그 결과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에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된 『조선사』가 만들어졌다. 이 책은 조선사편찬 위원회와 조선사편수회의 조직·인적 구성, 주요 집필자의 역할, 사료의 선별과 활용 방식을 살펴본다. 또한 단군과 기자조선 등을 둘러싼 한일 학자들의 갈등을 속에서 배제되거나 축소된 역사 인식도 함께 드러낸다. 이를 통해 ‘보여주고 싶은 역사만 보여준’ 식민지 역사 서술의 작동 원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오늘날 역사 자료를 읽고 활용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과 조선어학회 사건

이준식 저 | 130쪽 | 7,000원 | 2025년 | ISBN 979-11-7161-258-1

일제강점기 한글 운동은 우리말과 글을 정리하고 널리 보급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민족운동이었다. 이 책은 주시경 학파에서 출발한 한글 운동의 흐름과 조선어연구회의 출범, 조선어학회로 개편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조선어사전 편찬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 표준말 사정 등 우리말을 체계화하기 위한 활동과 이를 함께 이끈 사람들의 노력을 조명한다. 특히 1942년 일제가 조선어 학회를 대대적으로 탄압한 ‘조선어학회 사건’의 발단과 사법 처리 과정을 통해 언어를 지키는 일이 곧 민족을 지키는 일이었던 시대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이를 통해 한글을 지켜낸 이들의 치열한 노력을 되새기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언어와 문화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